

제목: 청소년을 위한 <어떤 민주주의로 갈 것인가> 강의 교안

교안 작성자: 이한

1. 강의 제목: <어떤 민주주의로 갈 것인가>

2. 강의 목적: 청소년들이 아래 사항을 이해한다. 특히 줄 친 부분을 전달한다.

(1) 민주주의는 다수결주의와는 다르다. 민주주의는 ‘복합 이상’ complex ideal으로서 구성의 대상이다. 따라서 하나로 명백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모델은 “개인이 각자 바라는 걸 제일 잘 충족시켜 줄 것 같은 사람 찍으면 그 바라는 걸 산술적으로 합해서 뽑힌 사람이 알아서 공동체를 위해 일을 하고 나머지는 따르라”는 모델이다.

(2) 민주주의 현실이 어디가 잘못되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심지어 현실 진단조차 어떤 모델을 상정해야 정확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3) 각 모델은 모두 그것을 지지하는 그럴듯한 논변을 담고 있다. 어떤 모델이 제일 잘났는지를 판단하려면 그 모델을 지지하는 논변을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다.

(4) 그 기준 중 핵심은 정당성이다. 정당성의 핵심은 평등한 배려다.

(5) 정당성 기준 해석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모델은 정당성이 크지 않고 좋은 민주주의에 많이 못 미친다.

(6) 그 예에 따라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실 중 일부를 평가.

(7) 결어 - 소고기 협상의 민주성 평가.

할 일 - 우리가 해야 할 것들.

강의 교안 (1시간 50분 분량. 이후 20분~30분은 질문 받음)

편의상 예삿말로 교안을 작성함.

0. 들어가기에 앞서

어떤 민주주의냐란 결국 정치를 어떤 제도를 통해 하느냐에 관한 문제다. 그런데 이런 문제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무관심이 정당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나는 아예 정치 자체에 흥미가 없다. 정치란 권력을 잡기 위해 서로 쇼를 하는 것일 뿐이며, 그보다 더 낫다 해도 기껏해야 다수를 조직하여 힘겨루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는 것은 나의 삶을 전혀 고양시키지 못한다. 삶을 고양시키려면 차라리 자기 수련을 하거나 종교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 굳이 고상한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먹고 살기 위해 쓰는 시간 이외의 남은 시간에는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주위의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싶다. 정치에 부러 시간과 정력을 쓰는 일은 톱니바퀴의 날이 나가듯이 내 삶을 소모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는 틀인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더 기대하는 바가 없으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위와 같은 생각은 진실의 일부를 담고 있다. 첫째로,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이 완전히 같이 갈 수 없고, 공적 생활에 일정부분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사적 생활의 양보를 그만큼 필요로 한다는 점이 그렇다. 둘째로, 사회 구성원들의 시간과 정력을 끝없이 요구해야만 유지되는 체제는 일종의 항상적 동원 체제이며, 그러한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충분히 수궁할 수 있는 이러한 명제로부터 민주주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첫째로, 이러한 말은 정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결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우 무지하여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나 청년을 생각해보자. 아르바이트비는 대부분 최저임금제에 의해 결정된다. 아르바이트비가 얼마나 하는 것이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증금을 내고 세를 들어가 살게 되면 나중에 종종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아직도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그 주택에 담보가 먼저 잡혀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없다.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해서 그래도 제일 먼저 주는 돈이 있는데, 그 적용 요건이 너무 협소하다. 주위에 전세금을 잃고 실의에 빠진 사람들을 한 둘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 최근에 수돗물 민영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다. 볼리비아에서는 수돗물을 민영화해서 물 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수질이 더럽게 나빠졌다. 그런데 이 민영화 결정은 정치가 한다. 정치가 아무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일 안하고, 집에 안 살고, 물 안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정치의 비중을 과소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쨌든 정치가 결정한 제약조건과 가능성 조건 내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둘째로, 정치적으로 아무런 견해를 가지지 않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아무런 정치적 선택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것은 착각이다. 실제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무관심은,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원을 만만치 않게 투입하는 개인이나 집단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지금의 질서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더 힘을 가지게끔 만들어준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 선택은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피해갈 수 없는 선택이다. 최소한 자신이 막 되먹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중대한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선택의 근거를 검토해볼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셋째로,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에는 개인적 해결방식과 집단적 해결방식이 있는데, 집단적 해결방식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부동산투기가 마구 일어나고 자본이 부동산으로만 몰리고, 부동산 거품이 생기고,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비싼 월세나 전세에 살아야 되는 상황은, 한 두 명이 노력해서 스스로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극장에서 한 명이 자세를 곧추세워서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은 잘 보이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곧 모두 그렇게 자세를 뻗뻗하게 해서 모두 다 불편하게 영화를 보게 될 뿐이다. 아무리 한국 국민 모두가 CEO가 되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도, CEO가 되는 사람의 숫자는 여전히 지금과 비슷할 수 밖에 없다. 학벌문제를 말할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지” 이렇게 말하면 지능 수준이 의심된다. 범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고정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다르다. 후자가 전자를 대체할 수 없다.

넷째로, 민주주의를 다수결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런데 이 전제가 틀렸다. 만약 민주주의가 다수결에 불과하다면, 민주주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정보를 수집하여 곧 사안사안을 속속들이 알고 열정을 투여하며, 반대자들을 비판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더 끌어모아서 힘 대결을 매번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삶이 피곤하고 소모적임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돌을 산 위로 올리는 시지프스의 삶 처럼 끝없이 계속된다면 여기에 진저리를 치고 정치도 민주주의도 관심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것도 이해될만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수결과 같지 않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그 요소로 포함하지만 그보다 훨씬 복잡한 복합적 이상이다.

그래서 결국 정치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정치적 무관심 자체가 이미 일종의 정치적 선택임을 깨닫는다면, 그 선택의 근거를 알아볼 필요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선택에 대한 검토가 항상적으로 사안사안 모두에 관심을 기울여라는 요구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회성원 전체의 동원이 필요한 체제는 안정적인 체제라고 할 수 없다. 그래도 지금 집단적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가 정도는 알아봐야 한다. 제대로 되고 있다고 안심할 수 있다면 무관심도 상당히 괜찮은 삶의 선택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50명이 각자 조금씩 쌈짓돈을 모아서 회사를 하나 세워서 그 회사에서 직접 일도 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었다고 해보자. 회사를 세웠으니 어떤 상품을 얼마나 많은 양을, 어떤 질로 생산해서, 누구에게 팔 것이며, 생산라인은 어떻게 조직할 것이며, 이윤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등등 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일단 대표를 10명 뽑아 놓기는 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삶을 고양시키는데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일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손떼겠다, 이런 말로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를 뽑긴 했는데 그 대표들이 제대로 의사결정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걸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대표가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대표를 그냥 뽑기만 하고 알아서 해라고 넘겨주는 시스템에 이미 흠이 있어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안나온다면 전혀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동업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에게 분배된 일에만 골몰하고 의사결정에는 별 관여를 안하는 선택을 하려면 최소한, 의사결정이 제대로 된다는 것이 무엇이나의 기준을 가져야 하고,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개관이 났느냐를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회사 운영이 개관이 되고 있다면 그 운영을 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정화시키기 전까지는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전에 회사가 망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당장 나머지 40명도 달려들어서 지금 의사결정 해야 하는 굵직굵직한 사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표로 뽑아놓은 사람들이 엉망으로 한다면 지적하고 난리치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고민하는 것이 시급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 고민을 끝을 보지 못하고 아유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손을 놓아버리는 것은 바보같고 무책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사회에서 법을 만들고 우리 삶을 전반적으로 결정하는 정치라는 놈,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좋은 싫든 따라야 하는 질서를 만드는 집단적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가를 점검해 보지 않고서는, 삶의 선택의 근거를 가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제대로 된 집단적 의사결정이 무엇이나의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한다면, 그 걸 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게 된다. 그러니, “제대로”란 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자.

1. 도입

(1) 헌법 제1조의 의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서 울려 퍼졌던 <헌법 제1조>라는 노래의 가사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보이기도 한다. 이거 부르면서 무슨 생각들 하셨나. 아마 이런 생각들 하지 않으셨나 한다. 즉 헌법 제1조가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통치자들은 국민 말 들으라는 것이다. 국민이 하지 말라는데도 왜 자꾸 하느냐, 열받는다. 소고기 협상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국민이 한 때 90%가 넘었다. 나를 포함한 국민들이 열받으니까 하지 마라. 그런데도 하면 민주공화국이 아닌 거다. 이거 맞는가? 만약 이렇게 직감적으로 딱 답이 나온다면 별로 여기에 대해서 공부 같은 것은 할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는 간단한 문제인지 아닌지 한 번 살펴보자.

국민이 열 받았는가? 그런데 지난 번 소고기 정국 때에 국민은 사실 세 부류였다. 하나는 진짜 열받은 부류, 다른 하나는 열받은 사람한테 동조하는 부류,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휘방놓는다면서, 열받은 사람에게 열받은 부류. 그래서 맨 마지막 부류에서는 ‘춧불좀비’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 대통령 선거광고에 나왔던 육쟁이 국밥 할매는 집회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면서 화를 내기도 했다. 국밥 할매는 국민 아닌가. 이렇게 보면 “국민이 열받았다, 하지 말라고 한다”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 사람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걸 하나로 묶으면 자기와 생각 다른 사람을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전제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은연 중에 국민에는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면서 쓰는 ‘국민’은 선동하는 단어로 쓰기는 좋지만 현실을 이해하는 단어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하지 말라고 하는 국민이 과반수 아니냐. 민주주의란 다수 국민의 뜻을 곧 국민의 뜻으로 보는 것이니, ‘국민이 열받았다’고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시키는 건 그대로 해야 되지만 민주적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학생들끼리 민주적으로 결정할 때는 손들어서 결정한다. 이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단순한 원리, 단일한 기준과 척도로 표현되는 이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주의란 “다수지배” 원칙이다라고 말이다.

어떤 사람은 이걸로 게임 끝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고민할 것 없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학생 중에서도, 그리고 20세 이상의 성인들 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민주주의는 다수지배, 곧 다수결 원칙이고, 이것이 훌륭한 점이 역사적으로 다 증명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다수의 의견이 곧바로 여론조사로 나온다. 그런데 지금은 다수지배가 제대로 실현이 안되고 있다. 정치가들이 돈 많은 사람 편 들어서 소수 부자들 이익만 챙기고 있다. 대통령이 다수의 생각을 손톱의 때만큼도 안여긴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여론조사 했는데 한나라당이 정당 지지율 1위였다. 시종일관 소고기 협정을 지지했던 정당이다. 이 당은 다수 여론이 반대하는 대운하도 팔려고 한다. 그럼에도 그 당의 국회의원인 박근혜씨가 다음 대통령으로 1순위 인기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고기에 대한 여론조사는 다수의 의견을 보여주었고, 정당지지는 소고기에 대한 것은 아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다수가 엄청난 바보라서 소수에게 속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

“다수지배”가 민주주의의 한 모습이라는 생각, 그리고 정당 지지에서 현재 다수가 소수에

게 속고 있다는 생각에도 큰 부분적 진실이 분명히 담겨 있다. 그러나 왜 강사는 이걸 부분적으로 진실이라고 할까? 전부 진실이 아닌가? 거기에 ‘전부’ 진실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2) 여론 조사에 의한 다수 지배

가.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으로 보았을 때 다음 현상들은 비민주적인가?

미국의 민권운동은 다수 백인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흑인차별을 시정하고자, 입법부가 통과시킨 차별적인 법을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군가산점제, 호주제, 동성동본 불현제도를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하였다.

나. 민주주의를 다수결 원칙으로 본다면 다음 현상은 민주적인가?

ex1) 다른 지역들 사람들이 몽쳐서(과반수다) 전라도 도민들에게 공직 취임을 차별한다.

ex2) 지구가 6천년 되었으며 인간과 동물은 원래 그 모습 그대로 창조되었다고 학교에서 과학시간의 반을 할애하여 가르친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ex3) 동성애를 했다면 그 이유 때문에 형사처벌을 한다. (한국의 군대에서 그렇고, 이슬람국가들에서 그렇다)

ex4) 활동적인 조직 폭력배는 51명이고 수동적인 농부는 49명인 사회에서 전체 투표를 하여 결론적으로 조직 폭력배에게 농부가 매달 곡식을 상납한다. (후견주의적인 정권에서 조직된 이익집단이 조직되지 못한 집단을 착취하는 구조는 실제로 발생한다)

이제 다수지배가 민주주의의 최종 답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특히 마지막 예에 주목해 보자. 세상에는 사실 명제가 있고 당위 명제가 있다. 그리고 정치학처럼 규범과 사실 명제를 동시에 다루는 학문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제일 기초가 된다.

예를 들어 강사는 머리가 좋다는 것은 사실 명제이고 이 강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 명제다. 그런데 이 둘을 그냥 연결시켜버리면 안된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사회가 좋다” 이렇게 쉽게 연결시켜 버리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오류다. 다른 예를 또 들자면 살인본능은 진화적으로 적응적 특성이다. 그러니까 살인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괜찮다. 이런 것도 오류다. 부모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하였다 또는 신은 전능하다 그러니까 신의 명령은 따라야 한다, 이런 것은 모두 논리적 오류다. 자세한 내용은 시민교육센터의 <윤리학의 기본원리> 강의를 참조하라.

이제 조폭 사례를 다시 보자. 이 사회에서 다수가 지지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에 불과하다. 조폭이 지금 돈을 달라고 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나 지금 비가 내린다는 것이나 모두 사실 명제에 불과하다. 사실은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사실에서 당위를 도출할 수는 없다. 이것은 철학의 기본 명제다. 이걸 어기면 안된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하는” 민주주의, 달성해야 하는 민주주의,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민주주의라는 이상이 당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이걸 공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론조사로 표현된 다수는 비공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또 잘 몰라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다수에게 뽑힌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이 한방으로 그냥 나가떨어진다.

다.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가?

ex) 한미 FTA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았다가 체결하고 나자 갑자기 지지 여론이 과반수가 되었다. 국민의 뜻이 자주 바뀐다. 어느 것이 국민의 뜻인가?

ex2) 여론조사는 정보를 다 듣고 잘 생각해서 낸 답변들이 아니다.

ex3) 애초에 거짓을 기초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에는 지구가 6천년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0%가 넘고, 인간이 달에 한 번도 안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3분의 1에 달한다. 한국에서는 혈액형 성격론 믿는 사람들이 과반수다.

ex4) 세금 줄이기를 지지하면서도 복지 증대를 요구하고, 국가가 의료비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의료보험료는 낮출려고 하는 등, 최소한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는 의견들이 조율되지 못한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이 되질 못한다.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ex5) 친구들끼리 2박 3일로 놀러 가려는데, 아무 조사도 안 한 채 그 자리에서 수다 떨다가 결정하는 것이 나올까, 책임감 있고 그런 거 잘 아는 친구한테 밥 사주고 맡기는 게 더 나올까. 우리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

여론조사가 국민의 뜻이라고 해버리면 엉터리 뒤죽박죽이 될 때가 많다. 이쯤 되면 “맡겨서 지도자가 알아서 하게 하자” 이게 오히려 민주주의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웬지 그건 아닌 것 같다. A가 아니면 B가 답이다. 이런 걸 흑백 논리라고 한다. 여론조사 다수결 아니면 지도자에게 위임해서 맡겨버리는 것 두 가지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휴대폰에 모델이 여러개가 있듯이 민주주의에도 모델이 여러개다.

2. 본론 : 민주주의에는 모델이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각자 자신의 이익에 관계된 것, 자신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바를 가장 잘 해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뽑은 다음 그 사람이 뭐든지 대신 해주고 나머지는 따르라는 식의 모델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거가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때때로 여론을 참조한다. (비체계적 여론의존형 선호집계 위임 민주주의)

(1) 위임 민주주의자의 항변

친구 사례에서 우리들은 ‘즐길 수 있는 멋진 곳에 놀러가야지’라는 목적을 위해 위임했고, 그게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내뱉는 한마디씩을 취합한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이명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상, 국민은 적법하게 이명박에게 권한을 위임하였고, 그 위임 권한 범위 내에서 이명박 정부가 협정을 맺었다고 본다. 이 주장에서 민주주의는 단순다수결과 동의어가 되고, 국민의 뜻은 선거에서의 투표로 집계된다. 그래서 집계된 대로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수단 방법은 알아서 잘 취해서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집계된 최고 목적은 경제를 잘 살리자는 거였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모두 각자 속에 품고 있는 소망이 있었다. 작년보다 ‘내가’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싶다! 이런 목적이 저번 선거에서 다수에 의해 표출된 것은 그 누구도 부정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값 올려서 소득을 올리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경제성장을 더 많이 해서 자신의 소득이 덩달아 올라가려는 것을 노렸다. 민주주의는 그런 노림수가 좋고 나쁘고 안따진다. 욕망이야 어쨌건 투표가 다수면 된다. 뽑히면 장땡이다.

그래서 CEO 출신이라고 이명박 뽑았다. 그래서 그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 대신해서 그

뿔한 사람이 잘 취한 수단이 부시에게 운전수도 해주고 소고기 협정도 맺은 것이다. 이 고매한 일을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내뿔은 여론조사 결과로 뒤집으려면 안된다.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우리 헌법이 시켜 놓은 대의제를 부정하자는 것이다. 집회 나온 사람도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집회는 선거가 아니다. 그런 집회 나온 몇십만명 가지고 어떻게 선거에서 현 정부에 투표한 사람 이기려고 하는가. 그건 다수지배에 오히려 어긋난다. 그래서 촛불집회 나온 사람들이 비민주적인 사람들이다.

(2) 모델의 존재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가. 여론조사 결과 90%의 힘을 업고 이 뜻을 따르라~ 주장하는 촛불집회 나가는 사람도 민주주의에 할말이 많지만, 투표로 제대로 뽑힌 국회의원 다수인 한나라당과 선출된 대통령이 지지하는 소고기 협정이 오히려 민주적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할말이 나름 있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런데 이 양쪽의 주장을 자세히 보면 “여론조사에서 다수를 국민의 뜻으로 보고 그것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와, “선거로 한번 뽑아 놓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놔둬야 한다” 등 “~해야 한다”는 어미로 끝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나, “~해야 한다”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당위 명제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걸 뭔가 서로 다른 것을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이 각각은 자신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모델’을 전제하고 있다. 휴대폰도 다 ‘휴대폰’이지만 다 같은 휴대폰이 아니다. LG모델, 모토롤라 모델, 삼성모델 다 다르다. 기능도 다르다.

(3) 모델을 지지하는 논변의 옥석 가리기

소고기 협정 잘 되었다, 촛불 집회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모델 따르고 있나? 그건 바로, 선거에서 ‘각자 개인적으로 제일 바라는 거, 원하는 걸 제일 잘 만족시켜 줄 것 같은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뽑힌 사람이 알아서 그걸 잘 해줄테니까 다음 선거 때까지 가만 있으라. 다만 뽑힌 사람은 다음 선거 결과가 신경 쓰이니까 전략적으로만 여론조사는 참조할게” 이 모델이 사실상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모델이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선호집계 엘리트민주주의다. 위임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선호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범죄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동성애자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거다. 집계란 그냥 그렇게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을 숫자로 합산해서 제일 숫자가 큰 걸 중시한다는 거다. 엘리트주의라는 건 그렇게 숫자가 크게 나온 목표를 정치가가 잘 알아서 달성해줄테니 잘 모르는 국민은 가만 있으라는 거다. 플라톤이 이런 말 했다. 집 짓는 건 목수에게 맡기고 전쟁지휘는 장군에게 맡긴다. 그런데 정치만 유독 어중이 떠중이 시정잡배에게 맡긴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 정치도 전문가가 해야 된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예전에 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씨가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을 때 뭐라 그랬나? 자기는 표층적 민심이 아니라 그 저변을 흐르는 심층적 민심을 읽고 따른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다. “여론은 귀담아 들을 것도 있지만 대체로 한 귀로 듣고 흘려 버린다” 이게 다 이 모델을 신봉하고 있어서 나오는 소리다. 지금 민주당이 현 정부가 국민의 뜻을 안따르고 민주주의에 대해 편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여당이면서 FTA 밀어붙일 때 어떻게 했다? 협상 비밀주의로 하고, 국가발전전략을 무조건 개방으로 딱 정해놓고 그냥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리고 밀어붙이니까 실제로 여론결과가 꽤 좋았다. 협정 체결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정사실화해서 FTA 지지한다. 국정홍보처 통해서 ‘홍보’하는게 소통이었다.

여론조사들 따라서 국회의원들 하는 이야기 잘 들어봐라. 자기 당이 주장하는 게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으면 “국민의 뜻”이고, 반대 당이 주장하는 게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으면 “포퓰리즘”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바보처럼 생각하는 것만 들어주는 인기영합주의”라고 비난한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다. 이게 여론조사는 제도적으로 지위가 주어져 있지 않고 그냥 전략적으로만 고려되는 대상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소고기 협정 날 때 민주주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간접 민주주의는 나쁘고 직접 민주주의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론에 제도적 지위를 주려고 한다. 이것도 하나의 모델을 주장하는 거다.

그런데 휴대폰 중에 어떤 모델이 제일 좋냐? 이렇게 물으면 그걸 평가하는 기준을 전제한다. 휴대폰의 외양, 기능 중에서 뭘 제일 중시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모델’도 결국 자신이 주장하는 모델이 왜 제일 좋은지를 뒷받침해야 된다. 이게 되지 않으면 다들 자기 모델 자랑만 하고 있지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비민주적이다’ ‘덜 민주적이다’고 이야기하거나 ‘더 민주적으로 하자’고 이야기하려면, 그 기준이 되는 모델을 정당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당화하는 말이 제대로 된 것이어야 한다.

그냥 우리나라 헌법이 대의민주주의 하고 있으니까, 대의민주주의가 제일 좋다. 선거에서 뽑았으니까 그 뽑힌 사람이 해야지. 다수가 하자면 따라야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권 앞에서도 말했듯이 조폭논리, 사실과 당위를 구분 못하는 논리다.

(4) 핵심 기준의 필요

이쯤 되면 엄청 복잡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모델이 다른 걸 보니 기준도 사람 생각마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괜히 이 강의 들었다. 이젠 어떤 걸 더 민주적이라고 해야 할지, 덜 민주적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듯 하다.

4. 정당성이라는 기준

(4) 핵심 기준의 필요

이쯤 되면 엄청 복잡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모델이 다른 걸 보니 기준도 사람 생각마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괜히 이 강의 들었다. 이젠 어떤 걸 더 민주적이라고 해야 할지, 덜 민주적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듯 하다.

복잡한 것을 조금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그림을 보라. 현실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기준이 모델 형태로 사람들의 머릿 속에 잡혀 있고, 각 모델은 그것을 지지하는 나름의 정치철학적 논변을 갖추고 있으며, 그 논변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 의사 결정을 하는 제도가 어떤 규범적인 기반 위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올라가게 된다.

서로 상충하는 논변의 우열을 가리는 근본적인 기준

모델1의 논변 모델2의 논변 모델3의 논변 모델4의 논변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

각 모델을 준거로 한 현실 민주주의 비판

여기서 현실 민주주의 비판의 준거가 될 수 있는 모델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델일 수도 있고, 현재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델일 수도 있고, 존재했거나 존재하는 모델에 영감을 받아 정치철학자들이 일종의 이념 형태로 구축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영감의 원천이지만 그때 그대로 똑같이 하자고는 하지 않는다.

어쨌거나 이 모델들을 옹호하는 논변은 크게 (1) 기술적 명제와 (2) 규범적 명제로 나뉜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란 “경쟁하는 엘리트 중에 일부를 뽑아서 관료제를 통제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다”라는 모델이 있다. 그 모델은 (1) 세상이 너무 복잡해서 대중은 복잡한 일을 직접 처리할 수 없다는 기술적 명제와 (2) 국가운영은 전체 국민의 선호를 얼마나 최대한으로 만족시키느냐는 효율성의 문제다라는 규범적 명제로 떠받쳐진다. 또 엘리트 민주주의 모델 중에서도, 엘리트가 국가를 통치하는 임기 도중에도 국민이 충분한 견제를 하게 하는 모델도 있을 수 있고, 힘 있는 엘리트가 일단 마음대로 하게 하자는 모델도 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기술적 명제와 규범적 명제를 갖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 모델은 (1) 세상은 복잡하지만 대중은 관심만 기울이면 복잡한 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2)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계속 내리는 대의자를 그대로 두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명제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 경쟁적 엘리트주의 모델이나 직접 민주주의 모델이 옳고 그른지를 살펴보려면(1)과 (2)의 명제를 더 높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술적 명제의 경우에는 실제 사실들을 탐구해서 결론을 내리면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쟁이 치열하지만, 시간의 제한 상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이 대체로 합의될 수 있는 사실 명제의 예가 아닐까 한다.

- ①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다.
- ② 대표자들의 견해가 존중받는 이유는 지성에서 국민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 ③ 정력과 시간의 한계로 모든 국민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직접 그 타당성을 다 검토하고 판단할 수는 없다.
- ④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잘못 생각할 가능성도 높다.
- ⑤ 국민들 가운데에서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 ⑥ 권력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으면 부패한다.
- ⑦ 권력이 존재하는 이상, 사회 내의 각 집단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신들에게 이로운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한다.

규범적 명제에 관하여 어떤 견해가 채택되면, 사실 명제들을 적용하여 모델을 짤 수가 있겠다.

규범적 명제의 경우에는 각 모델을 떠받치는 규범적 논변들의 옥석을 가릴 핵심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핵심 기준은 독단처럼 내용이 확정되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이

다.

민주주의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 일단 전제는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의사결정이 어쨌든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다음 문제는 그렇게 꼭 필요한 집단적 의사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생각하느냐의 문제다. 이게 바로 ‘정당성’의 문제다. 모델들을 지지하는 논변을 옥석을 가릴 핵심 기준인 것이다. 이게 뭔지, 이게 왜 핵심 기준이 되는지 설명하겠다.

그런데 정당성 Legitimacy 이란 무엇이나? 그것은 집단적으로 결정한 바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 합법성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따르게 만드는 이유를 말한다.

(2) 왜 핵심 기준이 되나?

민주주의란 정치체도의 한 형태다. 그런데 정치가 하는 일이 법 만드는 거다. 소고기 협정도 법이다. 한국에 광우병 위험 있는 소고기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두가지 중 하나다. 영희가 사는 한국에는 들어오고, 철수가 사는 한국에는 안들어오고 이런 것 없다. 집단적으로 다 따라야 하는 것. 누구는 따라도 되고 안따라도 되는 것 아니다. 안 따르면 법의 제재가 바로 들어온다. 누구로부터? 폭력을 독점한 국가로부터. 그래서 자기가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은 것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억울함이 생긴다. “감옥 안가야 되니까 따라야지~” 이건 정당성하고 상관없다. 감옥 가야 된다는 것은 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맨 뒤에 깔아놓은 폭력의 위협이다. 오직 그것 때문에 따르는 사람은 조폭 칼에 위협받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 박정희 시대 때 사람들 입에 재갈 물리는 법이 많았다. 그 법 어기면 감옥 같다. 그렇다고 박정희 독재 시절이 정당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 것이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의문이 생길 것이다. 일년에도 수백 개 법안이 통과되는 데 그게 매년 누적되면 많은 사람들이 수천 개의 조폭 칼 속에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살다간 억울함에 억장이 무너져서 빨리 죽는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무엇이나, 이게 이 억장 무너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란 것이 뭘 집단적으로 결정해서 궁극적으로는 폭력으로 실행하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방식에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억울함이 가장 안생기게 하는 제도가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게임 실력 비슷한 친구랑 귀가길에 매일 게임 해서 아이스크림 내기 한다. 그래서 오늘 졌다. 아, 아까 발차기만 제대로 할 쥬.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먹고 싶은 것이 내가 바라는 바다. 내가 바라는 바대로 안되어서 아쉽지만 억울하진 않다. 친구랑 게임해서 즐거우면 그것 자체가 나한테 좋기 때문이고 친구한테도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구가 주먹을 안휘둘러도 아이스크림 산다. 민주주의도 성격 나쁜 사람 말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정도로 기꺼이 따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한다. 이게 정당성이 있는 거다. 구체적인 정책은 많이 마음에 안들어도, 그 정책을 결정하는 절차가 사람들 모두에게 억울함 없이 납득이 가고, 더 나아가 전부에게 이득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거다. 그래야 정당 경쟁이니 하는 것들이 다 말이 된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모두 ‘집단적으로 결정된 규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학교 의무적으로 가야 하고, 학교 가서 어떤 과목을 배우고, 대학에 가기 위해 입학시험을 쳐야 하고, 공부 때문에 생활이 꺾진적으로 변하고, 이것이 모두 규칙 덕택이다. 정치가 삶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학교생활하면서 억울하다는 생각 안하나? 강사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억울하다는 생각 많이 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억울한 시기다. 머리랑

육체는 다 굵어졌는데 결정권이 안주어지고 시키는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것은 20살이 넘으면 법에 의해 성인으로 모두 자동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평생 결정권이냐 참여권이 없으면 평생 억울했을 것이다. 지금 선진 자본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영국 같은 데서도 예전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여성들이 다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다.

“억울해서 죽겠네, 힘만 주어진다면 판을 다 엮어버리겠다, 지금은 판 엮을 힘이 없으니 감옥 가기 싫어서 이거 다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병들어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있어도 그렇다.

5. 정당성 기준으로 본 민주주의의 요건

(0) 정의의 원칙에서 정당성을 도출

집단적인 의사를 결정하여 그것을 모든 구성원에게 강제하는 시스템 즉 정치체제가 정당성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핵심 기준을 도출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도출할 때 여러 방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제일 중심되는 도출 측면은 바로 사회 정의의 측면이다. 사회가 정의롭다는 것은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 이걸 나의 이익을 공정하게 다루는 시스템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현재 자신이 처해진 특수한 상황 때문에 공정하게 생각을 실행하는 데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상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 보자. “사회의 대체적인 산업발전의 정도, 인구, 필요한 직업 활동, 인간의 경향성 등은 알고 있지만 자신이 그 사회에서 어떤 재능을 타고 나서 어떤 집안에서 태어날지, 어떤 성별로 태어날지 등등은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서, 사람들이 합의할 정치체제의 원칙은 어떤 것이 될까?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합의되리라 보인다.

① 온전한 대표성:

(1) 대표의 포괄성: 대표가 필요한 경우에 대표는 모든 사람을 포괄해야 할 것이다.

(2) 대표의 비례성: 투표가치는 평등해야 하고, 불비례적으로 누락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

(3) 책임성: 대표는 제대로 견제되고, 자신이 약속한 것과 수행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4) 효과적 참여: 구성원은 대표를 견제하고 피드백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 대표를 선출하는 일을 넘어서서 실제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대표가 구성원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에는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

(5) 계몽된 이해(심의회): 집단의 의사결정은 제대로 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지, 무지하거나 왜곡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다음과 같겠다.

원칙 : 온전하게 대표된 인민이 공공의 논의 장에서 개방된 심의회를 통해 도출된 의사가 관철되어야 한다.

이제 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이 우리 민주주의에 구비되어야 하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1)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어떻게 하면 아이스크림 사주고 내일 한 판 더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까? 몇가지 조건만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뭘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데, 영희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한테 이익 되는 정책의 좋은 점을 다 이야기하는데 철수 보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투표하게 만든다. 그러면 철수는 억울하다. 그래서 정당성 있는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영희, 땡칠이, 바둑이가 전부 철수 보고 입 닥치고 있어라, 말 하지 마라, 결정해도 그게 효력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99%가 검열을 지지해도,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게 더 민주적인 거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뭐가 있나?

우선 집회의 자유가 포함된다. 집회 가본 적이 있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이다. 안가본 분들은 20살이 되는 해에 꼭 2번 정도는 참석해보기 바란다. 평생 집회에 안가본 사람들이 한국에는 너무 많다. 그래서 헌법 지킬 생각을 못하게 된다. 집회 가보면 뭘 느끼겠는가. 엄청 귀찮다는 거다. 교통비도 들고, 데이트 약속도 못잡고, 다리도 아프다. 구호 외치느라 목도 좀 아프다. 겨울에는 춥다. 사람이 많아서 화장실 줄이 100m에 가깝게 늘어서 있고 발을 동동 구른다. 요즘은 가끔 참석하지만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삼일이 멀다하고 집회엘 갔다. 갈때마다 느끼는 건, 귀찮아서 가기 싫어 죽겠다는 거다. 그것보다는 집에서 편하게 키보드 두드리고, 여론조사원 질문에 답하는 게 만배 십만배 쉽다. 그리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솔직히 좀 무서운 꼴도 많이 봐서 무섭기도 하다. 여기에 집회의 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 시간 쪼개서 좀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집회 나와서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들어봐라, 이런 거다. 보기에다 스펙터클한 효과가 있다. 이런 집회를 교통에 좀 방해된다고 경찰이 아예 못하게 할 권한을 갖고 있다. 에디슨 전구발명한지 백년 다 지나가는데 해가 좀 졌다고 못하게 한다. 집회란 정치적인 것이다. 때로 사람들은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참석한 걸 알리고 싶지 않아한다. 나온 사람들 사복 경찰들이 사진 다 찍고 마스크 쓰고 참석했다고 잡아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나? 그럴 꺼면 그냥 투표는 왜 비밀투표하나? 그냥 주민들 이름이 새겨진 용지에 동그라미 치게 하지. 그러면 금권정치도 막고 좋지 않나? 결국 그렇게 집회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억울함을 발생하게 한다. 귀찮아서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나 많이 나오는 사람들 목소리를 아예 안듣겠다는 거다. 임금님 귀는 귀 귀인데 그걸 말 못하게 한다. 대나무 숲을 다 없앨려고 작정을 지금 하고 있다.

둘째로 언론의 자유를 들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집단이, 언론의 자유를 법으로 처벌해서 완전히 부정할 수 없으니 이걸 돈을 사용해서 교묘하게 축소시키려고 한다. 경제력이 큰 집단이 매스미디어를 먹을려고 한다. 그러면 중요한 정보를 차단하고 구미에 맞는 정보만 내보낸다.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대단히 경박한 인물인데 벌써 3선 총리다. 형편없이 국가를 운영하는데도 쫓겨날 기미가 없다. 현실이란 각색을 한 다음 반복해서 들려주면 왜곡된 상으로 받아들이기 마련이다. 이렇게 왜곡된 상을 들려주도록 방송과 신문을 지배집단이 틀어쥐려고 한다. 지금 정권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번에 언론을 아예 유리하게 짜려고 한다. 스스로 정당성이 없으니 가짜 정당성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책 연구원들 연구 자율성을 해치고 민간 연구기관까지 압력을 넣는다. 연구원들이 박사 따고 그래서 몇져 보이지만 경제가 힘들어서 쫓겨나면 갈 데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연예인들만 피부맛사지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연구원들도 ‘논문 맛사지’를 받는다. 맛사지 한번 받고 나면 논문이 별개져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결론만 나온다.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같이 개인들 간의 소통을 정보통신기본법의 이상한 조문을 들고 나오는데다가 사이버모욕죄까지 가세시켜서 막으려고 한다.

이런 일이 모두 이루어지면 민주주의의 외피는 썼지만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될지 모른다. 세상에서는 아우성이 가득한데 거리와 방송, 신문, 인터넷, 그리고 연구자들의 논문에서는 일치단결한 평화가 가득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속도전 같은 전쟁놀이와는 어울릴지 몰라도 민주주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속도전이니 하는 것은 모두 위임 민주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위임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당성이 매우 낮다.

(2) 규범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기회, 정의를 실현하는 능력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걸 그대로 정치에 가지고 가서, 그걸 합산할 걸 국민의 의사라고 하는 점을 보자. 이걸 설명하는데 좋은 예가 이거다. 여러 지역에 사는 친구들끼리 일 년에 한번씩 모이기로 한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럴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3명이 서울에 살고 2명이 대전에 산다. 투표해서 어디서 모일지 결정한다. 그런데 3명이 숫자가 많다고 매번 서울에서 모이면 2명은 억울함이 생기겠나 안생기겠나. 생긴다. 억울해서 슬슬 안보기 시작한다. 즉, 집단적으로 결정한 걸 안따르려고 한다는 거다. 사회가 이렇게 되면 붕괴되고 민주주의가 안된다. 걸으로는 민주주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겨서 민주주의 아닌거다.

위에 2명의 친구가 왜 억울했는지 생각해 보자. 바로 ‘평등하게 배려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위 2명이 친구라고 생각해 보자. 그런데 서울 사는 3명의 친구가 “매번 한 표씩 행사했으니까 우리가 너네들 배려할 께 다 배려했어”. 이렇게 말하면 납득하나? 그런 말 하는 친구 있으면 때릴지도 모른다. 때리는 건 나쁘지만 열받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다수가 ‘개인적으로 제일 바라는 걸’ 중심으로 투표하고, 그걸로 결정이 난다고 해서 정당성이 있는게 아니다. 다수가 바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것이어야 한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옛날 이야기긴 하지만 1980년대까지 종종 벌어졌던 얘기다. 집에 형제가 3명이다. 그런데 둘째만 공부를 엄청 잘하고 나머지는 다 그만그만하다. 여러분은 그중 막내라고 해보자. 그런데 어머니가 둘째 형이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 가야 하니까 여러분 보고 고등학교 가지 말고 공장 들어가서 일찍 일해라고 한다. 그래야 전체 가문이 살아난다고 한다. 가문의 영광이다. 그런데 막내인 여러분은 둘째 형보다는 조금 공부를 못하긴 하지만 대학엘 가고 싶다. 형이 사립대학 안가고 집 근처 있는 국립대학 가면 여러분도 대학엘 갈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국립대학은 형이 갈 수 있는 사립대학보다 서열이 낮다. 그래서 공장에 가기로 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여러분은 그 영광스러운 가문이 평등한 배려를 한다고 생각하겠나? 물론 가문 전체의 소득은 올라간다. 당연히 평균 소득도 올라간다. 그렇지만 형은 서울에 가고 나서 추석 때 비싼 외제차 몰고 와서 뽐내기만 하지 나중에 도와주는 것도 없다. 형의 소득, 그것이 가문의 소득에 숫자로 포함된다는 것, 그건 억울함의 기준에서 보아서 별 의미없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들이 처한 현실이다. 전체 경제를 위해서 늘 언제 짤릴지 모르는 일자리에, 월급도 조금 받고, 목소리도 내지 말란다. 자본주의는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이 생긴다. 그걸 집중적으로 좀 부담해란다. 우리나라 사람은 일자리 잃으면 먹고 살기가 캄캄하다. 유럽처럼 실업해도 좀 살아갈 수 있게 보장이 안된다. 그리고 한 번 비정규직은 아주 소수만 제외하고는 계속 비정규직이다. 이런 사람들은 한나라당에 투표하던, 민주당에 투표하던 이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투표해도 억울하겠나 억울하지 않겠나.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괴상한 법을 만들었다. 원래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를 못한다. 그런데 “기간을 딱 정해서 기간만 지나면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해도 된다”는 식으로 판례가 계속 나와서 노동자들을 힘들게 했다. 그러면 입법부가 제대로 일한다면 어떤 법을 만들어야 했겠나. 기간을 정해서 노동자 쓰는 경우를 딱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해서 정말로 사업의 성질상 꼭 필요해서 쓸 수 밖에 없는 경우만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시절 기간제 노동을 사유불문하고 무제한적으로 법으로 완전히 합법화하고 대신에 2년 지나면 정규직 시켜준다는 법을 만들었다.

지금 한나라당이 이 2년을 4년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다. 왜 그러는가. 4년이면 뿔을 뽑기 때문이다. 원래 직장 처음 가면 어리버리한다. 그래서 어리버리한 사람들만 계속 쓰면 기업이 잘 안돌아간다. 군대에 이등병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라. 그래서 좀 오래 일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오래 일하면 사람들이 발언력이 생긴다. 노조도 만들고, 임금도 올려 달라고 하고, 자르려고 하면 그럴듯한 이유까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힘을 못생기게 하면서도 마음대로 편할대로 뽑고 자르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이러면 기간은 1년씩 재계약 맺으면서 4년 뿔 뽑고 3년 365일 되는 날 자르면 된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한번 비정규직 평생 비정규직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 사실 속셈은 4년 뒤에는 8년, 8년 뒤에는 16년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다.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이 4년이라는 것은 하나의 안정적인 계약기간이 아니라 6개월씩 짧은 기간을 계속 갱신해가면서 이어지는 4년이라서 중간에 사용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잘라버릴 수 있다. 한나라당과 현정권은 그것에 더해서 지난 노무현 정권이 확대했던 파견법도 무제한으로 확대해서, 아예 사실상 모든 업종에서 파견직을 쓸 수 있게 만들려고 한다. 이걸 노동하는 사람 착취해서 마름 같은 중간 착취자 배불려주고, 지주같은 직접 사용자가 배불리는 것을 모든 산업 영역에서 합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애초에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방향으로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MB 정권의 만행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긴 하다. 그러나 노동하는 사람을 탄압하고 배제해서 잘 사는 사람들 잘되려고 했던 방향은 두 정권이 같았다.

평등한 배려라고 해서 전부 똑같은 소득 수준으로 살자 이게 아니다. 최소한 왜 국민 중 일부가 부당하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 안정적으로 먹고 살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느냐 이 질문에는 국가가, 민주주의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비정규직 법안이다.

그런데 이제 한나라당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부정하려고 한다. 그래놓고 포장은 ‘일자리 살리기’라는 설탕을 입힌다. 지금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정규직으로 안만들려고 2년 되기 전에 다 잘라서 실업 대란이 올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계속 두도록 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논리적으로 저능아적인 설명이다. 기업이 사람을 자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다. 하나는 “정규직 안만들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경제위기 때문에 인원 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규직을 안만들기 위해서 2년 되기 전에 계약 갱신

을 안한다면 그 자리에다 다른 비정규직 데려다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은 바뀌었지만 실업률은 올라가지 않는다. 경제 위기 때문에 인원 감원이 필요하다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자를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니까 더 자르기가 쉬울 것이다. 그런데 “일자리” “경제성장” 이런 설탕 개념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을 못차린다. 왜 이 말만 나오면 정신 못차리게 되었는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 사람들 뭐가 문제였나? 사람들이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사람 뽑는 데 전부 투표하면서 자기 이익만 보고 투표했다.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값 올려달라고 이명박한테 투표했다. 부자들은 부자들 세금 깎아달라고 투표했다. 자영업자들, 노동자들은 경제 살려서 돈 좀 많이 벌어보자고 투표했다. 이걸 아까 예로 든 모임하는 친구들 사례에서, 서울 사는 친구들이 전부 서울에서 보자고 계속 이야기 한 거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속 그 위치에서 있어야 하는지 그거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 지금도 한나라당이 1등이나. 사람들이 복지제도 몰라서 그런 것 아니다. 유럽에 복지제도 하고 있는 줄 사람들이 잘 안다. 그런데 복지제도 해서 다른 사람 이익 보는 건 투표에서 고려하고 싶지 않은 거다. 얼마나 경제성장해서 월급 올라가나 이것만 생각한다. 비정규직이 노동자 중에는 반수 정도 되지만 유권자 전체로 보아서 그렇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다수가 계속 이런식으로 투표권 행사하면,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가 좋다고 국가보고 플레이스테이션 달라는 마인드로 투표하면, 하루에 매일매일 백날 투표를 해도 그 결과가 민주적인 결과라 할 수 없다. 그건 그냥 다수가 저렇게 말했다는 사실에 불과한 거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가 정당성을 갖추려면 투표만 했다고 다 갖춘 게 아니다. 그 내용도 중요하다. 그런데 심각하게 안좋은 내용이 어떤 모델, 어떤 절차 때문에 도출된다. 수돗물에서 계속 녹물이 나온다, 그러면 파이프가 녹이 슨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모델을 작동시켰는데 국민 중 일부를 계속 왕따로 만드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 모델과 절차는 크게 잘못되었다.

물론 또 똑똑한 학생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다. “민주주의란 원래 결과가 불확실한 게임 아닌가? 결과를 가지고 게임을 왈가왈부 하면 게임 자체의 존립을 뒤흔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을 같이 하자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강사 개인이 결과가 나쁘다고 본다고 해서 지금 한국 민주주의 모델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아주 예리한 질문이다. 결과를 가지고 마음에 안드니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켜버리면 게임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까 잘못된 주장이다. 그러나 결과도 결과 나름이다. 예를 들어 어떤 멋드러지고 판타스틱한 언변으로 포장된 절차를 따르든 간에, 그 결과가 누군가를 고문하거나, 노예로 만들거나 그러면 절차가 크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치챌 것이다.

그러면 웬만한 문제에서는 의견이 대립하는 양식이 있는 사람들도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다는 소리다. 그게 뭐냐? “인권”이다. 그런데 인권에는 경제적 인권, 평등에 대한 인권도 있다. 그 내용은 경제적인 생활관계에서 국가가 국민 중 일부를 영원히 왕따시키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철학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도출될 수 있는 주장이다.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 국가에 대해서만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수사한다고 아무 집에나 막 들어가서 물건 가져가고, 아무나 막 잡아가지고 일단 고문해서 물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놔주고, 이런 거 잘못되었다는 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생각이다. 또는 국가가 갑자기 아무나 찍어서 세금을 걷고, 세금 냈는데 또 똑같은 이유로 계속 내게 하고 이런 것 말이다. 그런 생각이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은

전제 국가에 대항하여 발전하여 온 것이 맞고, 우리 헌법에 있는 기본권이라는 것도 그 유래를 보면 국가의 침해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시작되어 온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 유래일 뿐이고, 제대로 된 논의를 한계짓는 근거일 수는 없다. 그렇게 보면 국가의 할 일이라는 것은 자신이 국민에 대하여 침해하는 것을 계속 삼가야 되는 동물이 되어버린다. 즉, 국가라는 놈은 무얼 하는 놈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게 된다. 계속해서 자기 나와바리를 축소시키는 강패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국가는 강패가 아니다. 국가는 정치질서 political settlement를 세우는 존재다. 그리고 이 정치질서는 국가에 대한 인권 뿐만 아니라 국민들 상호간의 인권도 보장하는 형태의 질서여야 한다. 국가가 국민들 상호간에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더 부추기고 합법화한다면 이런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의무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집단적 의사결정체도가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합의에 의해 노예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보자. 국가가 그런 노예계약을 무효화시키고, 노예주인 행세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은 것이다. 왜 그런가? “노예제도는 나쁜 것이다”라는 생각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취향에 불과한 독단이 아니다. 그것은 이 사회가 최소한 두 가지 신념 위에 구축되어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모든 인간의 삶은 객관적인 가치를 지닌 특별한 것이라는 신념이다. 삶이 성공적이고 그 잠재성이 실현되면 좋은 것이고, 삶이 실패하고 잠재성이 낭비되면 나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삶의 객관적 가치는 그 공동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신의 삶은 목적이고 타인의 삶은 수단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 존엄에 어긋난다. 그런 것이 타당하게 되면, 전제군주가 소년들을 모아서 거시기를 다 잘라버리고 환관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노예제에 있어서는 노예가 되는 사람들의 삶의 객관적인 가치가 그 실현에 완전히 실패하고 낭비되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노예주는 목적으로 다루면서 노예는 수단으로서 취급해버려서 마치 사물처럼 다루는 것이어서 나쁜 것이다. 둘째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의 성공을 실현할 특별한 책무와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무엇이 그를 위해 가장 성공적인 삶일까를 결정하는 일도 포함된다. 노예는 이것이 부정된다. 자기 맘대로 삶을 주재할 수가 없다. 전부 노예주인이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책을 볼지 말지 결정하는 일을 국가나, 국가가 아니라도 주위 사람 다수가 강제로 결정하게 해버리면 인권침해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두 원리는 전통적으로 평등, 자유라고 불려왔다.

결국 국가라는 존재는, 국민들이 이 두 원리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존재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하는 일이 만일 이 두 원리를 따라서 실시했다고 제대로 된 변명조차 할 수 없는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권이 침해된 것이다. 예를 들어 범죄 혐의자, 피의자를 고문해서 자백을 하게 한다고 해보자. 그건 수사라는 국가작용의 편의와 다른 사람들의 잠재적 안전을 위해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수단으로서 다룬 것이다. 그래서 두리몽실하게 “다수가 이런 이런 이유로 필요로 하니까”라고 말하는 것은 제대로 된 변명이 되지 않는다. 국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삶이 최대한 이 두 원리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평등하게 배려’해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경제질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자.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보장받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첫번째 원리, 평등에 어긋난다. 예를 들어 교육이 전부 사적 영역으로 취급되어서 돈이 없으면 아예 받지도 못하게 되는 자본주의 사회를 생각해보자. 그냥 부모가 돈이 없었을 뿐이다. 거기에는 어떤 도덕적 의미도 없다. 도덕적으

로 자의적이 사태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실현시킬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소득이 똑같이 만드는 결과평등을 추구한다면 ‘평등한 배려’를 한 것일까? 그렇게 볼 수 없다. 두번째 원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를 채택한 어떤 사회가 있는데, 다만 현실사회와는 달리 모든 사람이 각자 동일한 출발점을 지닌 자원을 가지고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해보자. 이 사회에서 A라는 사람은 소설을 쓰기로 결심했고, B라는 사람은 빵 만드는 회사의 생산직 사원이 되기로 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의 소설이 너무 안팔렸다. 사람들이 A라는 사람의 소설을 별로 읽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는 물론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몇년간 창작에 매달렸을 때 자신이 재능이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럴 줄은 몰랐다. 사실 B도 그런 착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생활이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원하는 빵을 만드는 데에 종사하기로 했다. 만일 A가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만들면서, 생활수준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는 일을 하는 사람과 똑같이 받겠다고 하면, 그것은 자신의 인생계획에서 발생한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A의 소득이 B의 소득보다 많이 못미친다고 해서 B의 소득을 떼어서 A에게로 주면 그것은 오히려 평등한 배려를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B도 자신의 생활비용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당할 수만 있었다면 빵 대신 소설을 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빵 같은 것을 생산하는 사람과 똑같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면서 그 소설의 훌륭한 여부에 상관없이 빵 만드는 사람과 계속 동일한 소득을 얻는 것은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에서는 실현하기가 힘든 상태다.

그래서 평등한 배려를 하는 공동체는 경제질서에서 첫번째 원리와 두번째 원리를 다 같이 잘 지키는 공동체다. 그리고 경제질서의 어떤 부분이 첫번째 원리와 두번째 원리를 잘 따르려고 하여 그렇게 나왔다고 볼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게 된다. 정당성이 없게 되는 것이다. 못사는 부모의 자식은 계속 못살게 되는 경향이 심하다거나 하는 경우가 그렇다.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을 계속 그대로 두는 사회가 그렇다. 노동자의 일부는 정규직으로, 일부는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서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 고용 안정성, 노동3권의 행사에 있어 계속해서 큰 차별을 지속시키는 사회도 그렇다. 인권을 충분히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평등에 대한 인권의 자세한 내용은 시민교육센터의 로널드 드워킨의 <민주주의는 여기서 가능한가> 강의를 mp3로 듣기 바란다.)

귀류법적으로 한 예를 생각해 보자. 국가가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을 전혀 개선 안하려 할 뿐 아니라, 아예 그 차별을 “공동체를 위한 필요악”으로 보고 지속시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성이 왕따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걸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지만 그 사회가 번드르르하게 선전하는 민주주의가 뭔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가 수돗물 민영화 자꾸 하려는 속셈을 보인다. 수돗물 회사 운영하는 국민은 좋게 해주고, 수돗물 싼 값으로 먹고 싶어하는 국민은 왕따시키려는 거다. 그리고 수돗물은 아주 기본적인 거다. 기본적인 걸 돈 때문에 못먹게 하는 것은 평등한 배려가 아니다. 이걸 “국가 전체가 돈 많이 벌게 해달라매. 그렇게 하려면 수돗물 민영화 해야 되.”라고 이야기 하면서 강행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도 무력화시키고 싶어한다. 부자들은 다른 보험 드는 식으로 빠져나가게 만들려는 야심이 있는 듯 하다. FTA도 독소조항, 보상 문제는 생각도 안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싶어한다. 왕따를 광범위하게 시키는 것을 빨리 빨리 밀어붙이고 싶어한다. 왜냐하면 이걸 한번 통과시키면 정부가 바뀌어도 그 구조상 되돌리기가 아주 힘들어지기 때문에, 한번 왕따는 영원한 왕따 이렇게 아예 고정을

시켜 놓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왕따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답답한 경우가 있다.

(3) 다수지배와 정당성의 연결고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다수가 사회적으로는 약자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합리적인 이익” 챙겨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할 때가 많다. 그래서 아까 “다수지배”가 민주주의라는 말에 부분적인 진실이 들어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완화 반대하는 사람이 다수인데, 이걸 완화 반대가 정의로운 일이기도 하다.

여러분들 수업시간에 “민주주의는 다수지배지만 소수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권리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이야기 들었을 것이다. 그거 알맹이 없는 이야기다. 어떤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건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야기를 안해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이야기는 자세히 못하겠지만 정당성과 관련 있다는 걸 어렵듯이 눈치 챘을 것이다. 예를 들어 왕따 당하는 사람이 소수라도 그 권리는 존중해줘야 된다. 마광수 교수처럼 입틀어 막혀서 표현 못하는 사람을 보고 좌우좌를 막론하고 다수가 고소해 하더라도 그 사람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소수가 부당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권리라고 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상당히 미묘하다. 왜냐하면 다수는 항상 소수에 대해서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공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집단지기주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이 있다. 집단이 이기적인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밥그릇 걱정 하는 것 당연하다. 여러분도 직장인이 되어보면 밥그릇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밥그릇 걸고 옳은 행동,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도 알게 된다. 이걸 여담이고, 어쨌든 자기 이익과 밥그릇은 다들 모두에게 소중하다. 그런데 당연히 그것들이 상충한다. 그것을 조율하는 것이 정치다. 그런데 조율하려면 조율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 기준이 정치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이익을 주장하면 ‘밥그릇 지키기’로 매도되는 것이다. 그런데 21C까지 꾸준히 발전해 온 사회윤리학의 논의에 따르면 누군가의 밥그릇은 정당하고 누군가의 커다란 황제밥그릇은 특권이다. 이 둘은 구분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반대 여론이 80%였다. 강만수라는 형님이 계시다. 이 형님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반대가 압도적이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1%가 내는 세금을 1%한테 물어야지 왜 나머지 80%한테 묻냐?”고 일갈하셨다. 증부세 안내는 게 다수결로 침해할 수 없는 소수의 권리라는 거다. 그러나 그것은 침해할 수 없는 소수의 권리가 아니라 기득권자가 있다는 점에서 순환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특권에 불과하다.

여기서 말하는 특권과 권리의 구별은 헌법재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실정법에 관한 논의가 아니다. 지금 실정법에 의해서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 것들도 사실 제대로 따져보면 특권일 수도 있고, 지금 실정법에 의해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익도 제대로 따져보면 권리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매일 하루 12시간씩 일을 시키겠다, 이런 것도 거기에 대해 규율하는 법체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실정법상 허용되는 이익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새로이 개입하려는 법률이 다수의 횡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 완벽한 세계이면 모르겠지만 심하게 불완전한 세계가 아닌가. 심하게 불완전하게 세계에서 제대로 된 세계로 가려면 실정법에서 인정되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어떤 것이 특권인지 권리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까놓고 말하면, 다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익을 나누자고 하는데는 본질적으로 가치있는 점이 없다. 조직폭력배 예를 들면서 이권 이미 설명했다. 지금 다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소수가 어떤 이익을 누리고 있는지를 판명하고, 지금 현재의 이익 분배상태가 앞에서 말한 인간존엄의 두 원리,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 얼마나 부합하느냐를 따져보아야 한다.

여기서 부합하느냐를 따질 때 현실을 기준으로 현실을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면 봉건 사회에서 귀족이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권리가 되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중세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각 사람들이 누리는 이익들을 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고 해보자. 이 때, 귀족이 일방적으로 “다수가 소수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귀족이 누리는 것이 권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귀족이 누리는 것들이 정당한지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가장 잘 따라서 조직된 가상의 공동체를 생각해볼 수 밖에 없다. 중세사회는 기본적으로 농경제 사회다. 교환이 일부 있기도 하다. 그런 사회에서 평등과 자유를 따라 사회를 조직하려면 농지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농지가 한 가문에만 대대로 내려올 근거를 평등주의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또 농지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처분에 예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세대에서 사회가 끝나지는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소수에게 농지가 집중되지 않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평등하게 분배된 농지를 바탕으로 해서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덜 성실하게 일하고, 누구는 농사보다는 수공업에 더 투자를 하고 이런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귀족의 항변은 사실 특권을 고집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100명이 사는 사회에서 2명이 재능이 뛰어나다. 그런데 2명 중 A는 자기 재능을 아주 잘 발휘하는데, B는 아주 게으르다. 그래서 나머지 98명이 그 B를 노예로 만들어서 A가 현재 버는 소득만큼 주면서 시키는대로 일해라고 한다. 그런데 B는 놀고 싶다. 재능이 있는 줄은 알지만 일하기 싫다. 그러면 B가 놀면서 다른 사람들만큼만 소득을 보는 것은 권리인가 특권인가?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 따라 조직된 사회에서 여가시간을 조절하고 놀 권리는 누구에게나 다 동등하게 주어진 것이다. B가 설렁설렁 놀고 지내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다. 그런데 재능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가 박탈당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집단적 결정은 민주주의의 허용 범위 밖에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산업사회이고 시장경제 사회다. 이 사회에서 넓은 주택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지가상승으로 인해 투기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귀족의 항변에 속하겠는가 아니면 여가를 더 좋아하지만 강제로 일을 해야만 하는 재능있는 노예의 항변에 속하겠는가? 주택이라는 것은 누구나 필요로 하는 것이다. 주택 값이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은 비싼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한다. 거기다 자본이 전부 주택으로 몰리니까 국민경제상에도 좋지 않다. 언젠가는 터져서 큰 일을 만들 거품을 키우는 대가로 생산적 투자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제한하려고 한다. 이제 가상적으로 자유와 평등에 따라 조직된 사회, 즉 출발점에서 평등한 자원을 가지고 시작해서 필수적인 자원은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게 하는 규칙에 따르면서도, 선택에 따라 달리 결과가 나오는 사회를 생각해보자. 그런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넓은 주택을 두 채, 세 채 가지면서 투기차익을 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주택을 두 채, 세 채 가지는 것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군가 그런 식으로 주택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리고 규모가 큰 주택을 중심으로

투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의 공급은 계속 적어지고 또 그것을 살 수 있는 기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규모가 큰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가격 상승을 통해 노리는 이익을 제한해도 다수 주택 보유자는 특별히 희생당한 것이 아니다. 보유세가 다른 것에는 부과되지 않는데 주택에 대해서만 부여된다고 하는 형식적인 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특별히 희생당하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공정성이다. 그리고 이 공정성은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 따라 조직되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가지게 되는 권리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비슷한 예로, 문화재를 계속 부유한 수집가가 독점하고 있었는데, 국가가 입법으로 이제 사인이 문화재를 함부로 수집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정치광고를 텔레비전을 통해 돈 많은 사람들이 유리한 내용으로 많이 많이 내보내고 있었는데 법으로 그것을 제한시킨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다. “다른 표현의 자유는 제한 안하는데, 정치광고만 제한하느냐, 이것은 권리 침해다” 이런 식의 항변은 특권과 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제한하는 것이, 기존의 다른 이득 제한 형식과 꼭 부합하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봉건 영주는 “이제까지 상속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한 적이 없었다, 이것은 권리 침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대하여 비슷한 맥락에서 판단했다. 규모가 큰 다주택 보유자에게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권리 침해가 아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 규정과 현재소득 없는 1주택 보유자의 문제에 관하여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했다. 세대별 합산 규정에 관하여 강사는 헌법재판소가 특별한 희생, 즉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과세 형식의 차이에만 주목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보지만, 여기서 다루는 논점에서 그 점은 부차적인 것이다. 원리상 중요한 쟁점은 상당한 정도의 세율을 통해 여러 토지를 보유하면서 투기 차익을 누리는 이익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가이다. 그러면 그 이익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규범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냥 “다수가 원한다” “다수가 자기 문제도 아닌데, 뭘 결정할 권한이라도 있나? 이걸 소수 권리에 대한 침해다” 이런 식의 공허한 말만 오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냥 힘싸움 하는 것이다. 결국 권리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가 그 사회구성원을 모두 평등하게 배려했을 때 다들 보장받을 수 있는 이익과 자유인데, 사회구성원들의 밥그릇 문제가 권리에 들어가는지 특권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그런 논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수가 존재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여튼 결론만 말하면 종합부동산세 안내는 것은 소수의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고, 그것도 사회에 해를 끼치는 특권이다. 부동산 거품과, 비생산적 불로소득, 일반 국민의 거주권 불안정 때문이다. 내야 된다.

여기서 다수의 “합리적인 이익”이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는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꼼꼼히 잘 따져서 생각해봐야 한다. 당위의 문제는 윤리학으로, 사실의 문제는 과학으로 추론해 들어가야 한다.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추론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별 생각도 안하고 장사할 때 어떻게 하면 돈 잘버나 하는 그 껌냥만 가지고 그대로 투표장에 갖고 가서는 “합리적인 이익”도 안된다. 그렇게 해서는 “부자한테 종합부동산세 내게 하면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한국이 안되어서 경제가 안돌아간다, 지금 투기규제 지역 완화하고 그린벨트 다 풀어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말에 속는다.

다수가 곧 약자인 한국사회에서 다수지배와 정당성 있는 민주주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 그렇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이 연결고리는 약하다. 속이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날뛰면 이 고리는 이상하게 영켜서 권리가 아니라 특권에 봉사한다. 그래서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속지 않으려면 심의하고 숙고해야 한다.

(4) 심의된 의견과 정당성

이제 마지막 예만 들어보자. 친구들 10명에서 2박3일로 멀리 놀러가기로 했다는 아까 예를 생각해보자. 전부 학교에서 공부만 성실히 하다보니 뭐가 재밌는 데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친구 한 명을 뽑았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일을 추진시키고 있는데, 사실 보니까 이 친구가 펜션 주인이랑 짜고, 좀 비싼 데를 예약하고 소개비로 그 펜션 주인한테 돈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친구가 문제를 제기하니 “나를 한 번 뽑았으면 그냥 놔둬라. 입닥쳐!”라고 이야기한다. 한 번 뽑았다고 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못하게 하면 억울하다. 그리고 다른 8명의 나머지 친구들도 그 사실을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된다면 억울할 것이다. 반면에 대표로 뽑힌 친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 한 명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서 엉터리 소리로 나머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일을 방해하면, 그때는 동조했지만 나중에 결국 모든 사정을 알게 된다면 나머지 친구들이 전부 억울해 할 것이다.

결론이 뭐냐, 정치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도, 전문가가 사실 더 바보일 수도 있고 사욕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제대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다. 이걸 단순히 여론조사에서 물어서 대답하는 것과는 다른 “제대로 생각하고 토의하는” 국민의 토론 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엘리트들 뽑았으면 다 놔둬라”는 모델도, “여론으로 직접 다 결정하자”는 모델도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엘리트가 다 하고 여론은 전략적으로만 활용된다. 이게 지금 대의민주주의의 큰 문제 중 하나다. 인터넷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인터넷에서는 바보 같은 의견도 얼마나 많다. 바보의 의견과 제대로 된 의견이 구분이 안된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제대로 된 의견까지 도매급으로 무시한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서, 자 이게 당신네 엘리트들이 낸 결론이랑 다르긴 하지만 아주 제대로 잘 생각해서 내놓는 일반 국민의 의견이오 이렇게 딱 제시를 할 수 있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민주주의는 “아무렇게나 생각한 여론의 직접 지배도” “통제받지 않은 엘리트 의사의 지배”도 아니고 “심의된 인민의 의사가 지배하는” 제도라고 봐야 한다. 그런 제도는 어떤 제도일까? 시민교육센터의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 - 삼각 민주주의>란 강의를 참조하면 대체적인 초안을 볼 수 있다. 핵심은 아래와 같다.

- (1) 이익집단과 시민 결사체는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지 않고, 세금으로 충당되는 여러 장의 쿠폰 형태로 선택권을 가지는 시민들로부터 직접 재정의 지원을 받는다. 재정의 지원을 받은 시민 결사체는 곳곳에서 시민교육모임을 만들어 심의능력을 높인다.
- (2) 정당은 그 내부에 정책 형성 과정에 당원들이 심의를 하고 경쟁적인 안을 제출하여 투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 (3) 추천 형태로 구성된 시민들의 모임이 지역적, 국가적 정책을 일정한 절차 하에 토의하고 표결하여 이 결과가 지역의회나 중앙의회의 결과를 압도한다.
- (4) 전적으로 세금에 의하여 운영되어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각 시민결사체와 정당이 제출하는 안에 대한 설명을 읽을 수 있는 정치신문이 모든 가정에 보급된다.

(5) 행정부 내부에는 추천 형태로 구성된 시민들이 정책 초안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 표결한다.

아직까지 이런 제도를 헌법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먼저 정당 정치부터 바로 세우면서, 동시에 정당정치를 바로세우는 이슈로 위와 같은 심의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추구해야 한다.

(5) 정당정치와 심의

사실 정당 정치가 잘 되면 심의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다. 정당 내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정보도 교환되고, 더 좋은 안도 나오고, 바보 같은 의견은 없어지고 하기 때문이다. 또 이익집단들하고 국회의원하고 바로 연결되어 버리면 엉터리 같은 법안 나오는데, 활발하게 활동하는 당원이 많은 정당이라는 큰 틀에는 이익에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엉터리 같은 사욕 추구를 걸러준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정당은 국회의원들 모아 놓은 걸 정당이라 한다. 당원이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가랑 합세해서 여론을 자꾸 조작하려고 한다. 그렇게 조작되고 매스미디어에 이리저리 치인 국민들은 아무 생각도 안하고 여론조사에 답하곤 한다. 한마디로 정당이 허약하다. 그래서 엘리트들하고 사욕 챙기는 사람 하고 짝꿍이 되어서 나머지 국민에게 피해를 줘고 이걸 걸러줄 데가 없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피해 받는지도 잘 모른다. 그래서 아까 ‘숙고 있다’는 말에 부분적으로 진실이 담겨 있다고 한 것이다.

6. 결론

이제 정당성을 기준으로 민주주의의 요건을 몇 가지 살펴봤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고, 모든 이가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수준을 갖출 수 있어야 하고, 다수는 자기 좁은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 정의를 기준으로 투표에 나서야 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좀 생각을 해 보고 합리적인 자기 이익을 실현시켜 줄 정책이나 정당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하고, 여론이나 국회의원, 대통령 투표 말고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잘 생각해 본 의견이 이것이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고, 활발하게 당원들이 활동하는 정당정치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얼마나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게 우리사회의 민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리고 소고기 협상 당시 정부가 보인 태도의 민주성도 한 번 살펴보자. 일단 소고기 협상에서 문제되는게 무엇인가. 미국 소고기 알레르기가 아니다. 광우병이다. 광우병은 아직 그 메카니즘이 다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병이다. 광우병은 전담병이다. 이게 한 사람이 걸리면 사회 전체로 퍼질 수 있다는 거다.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 또 알레르기처럼 개인적으로 미리 알고 대비하고 통제할 수 없다. 강사 친구 중에는 오이 알레르기라서 김밥에서 오이 빼고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광우병 소고기는 이런 식의 개인적 차원의 대비가 안된다. 국가가 나서서 검역을 하고 예방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확률 게임이 되어 버린다. 이렇게 수치로는 표현되지 않는 ‘위험 고유의 성격’이 존재한다. 민주주의는 이런 위험 고유의 성격을 무시하면 안된다.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것은 관료경영주의, 기계적인 전문가주의다. 그래서 이때까지 사망자 수만 가지고 교통사고랑 확률적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다. 국민들이 그 위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

더군다나 이런 위험성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는 특히 민주성이 강해야 된다. 친구 10명에서 모이는 동호회가 있는데 6명이 갑자기 에베레스트 등반하자고 하고 따라야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에베레스트 등반 정도 되면 10명 모두 다 납득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등반의 위험은 뭐고 좋은 점은 뭐고 탁 까놓고 투명하게 천천히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아주 소수만이 지지하는데 밀실에 거짓말까지 하면서, 결정적으로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가 후퇴했는데 후퇴 안했다고 하면서.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집회도 몇 번 지켜보는 척 하더니 나중에 철저히 다 때려잡았다. 그리고 ‘나를 경제를 위해서 뽑았고, 경제살리기 위해 부시에게 쇠고기 선물 한거니까 다 나를 따르라’는 식이었다. 국민들 중에 광우병 걸린 소고기 0.1g만 먹어도 바로 전 사회로 퍼진다, 한국인이 광우병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식의 잘못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도 많았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광우병은 복어독과 같아서 특정위험부위만 빼면 복어독 빼고 복어를 먹듯이 살코기 먹어도 된다는 사람까지 있었다. 엘리트가 국민보다 훨씬 무식한 경우였다는 거다. 광우병의 과학적 위험을 먼저 객관적으로 공유하고, 그 다음 그 위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견을 들은 다음, 그 다음 단계로 그래서 그 위험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했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완전히 생략했다. 예를 들어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고기를 수입하는 일이 처음 인터넷 등에 대해 유포되었던 것보다는 위험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더라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역시 중요한 논의의 주제가 되었어야 한다. 지금 한우는 2008년 이후 사료 정책이 더 엄격해졌다. 그런데 미국소는 이런 축산 정책이나 검역 정책을 할 권한이 없다. 전문가들이 기계적으로 위험 수치를 뽑아내어서 지도자가 “뭐, 그 정도면 감수하지 뭐”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권한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식한 태도다.

그리고 이런 무식한 태도는 오직, 우리가 정당성이 별로 없다고 평가했던 ‘각자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거 돈 버는 거 그거 따라 나를 뽑으면 그걸 위해 내 마음대로 할게’ 그 선호집계 위임 민주주의 모델에만 기대고 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다. 오늘 이야기 해준 것은 사실 매우 단순하게 이야기한 것이고, 다른 이야기 못한 것이 훨씬 많다. 민주주의는 감이 아니다. 단일 기준도 아니다. 그것은 복잡 이상이다. 그리고 그 이상은 모델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모델들은 다들 자기 잘났다고 한다. 그래서 그 모델을 지지하는 논변을 이해하고, 그걸 제대로 평가하는 기준을 정당화해야 한다. 이걸 공부해야 알 수 있다. 자기 잇속만 챙기고 투표를 하거나 정치적 행위를 하면 안된다. 거기다가 자기는 ‘내 부동산에 세금 내는 건 피눈물이 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 놓고, 남이 하면 ‘밥그릇~ 우~’ ‘집단 이기주의~’ ‘무지렁이들이 국가 공동체 전체가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되지 않으면 21세기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모르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그렇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태도가 민주주의 발전을 좀먹는다.

우리는 아까 사실과 당위는 구별된다는 거 하나 배웠다. 다르게 말하면 현실과 당위는 늘 구분된다. 여기에서 세 가지 교훈이 도출된다.

첫째로, 현실이 완벽할리는 없으니까, 당위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안다. 공부를 게을리 하면 안된다.

둘째로, 자기충족적 예언을 하면 안된다. “현실이 그러니까 당위가 쓸모 없지 뭐” 이렇게 자포자기해서는 안된다. 뭔가 조금이라도 당위에 다가갈 수 있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이걸 안하면서, “역시 안바뀌네, 아무것도 안하길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채수 없다고 본다. 그렇게 채수없는 사람들만 살았으면 우리는 아직도 군부독재시절에 살고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조금 다르다. 그러나 한나라당/민주당과 민주노동

당, 사회당, 진보신당은 크게 다르다. 다른 걸 못보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정치란 썩었어하며 관심 끊어버리고 역시 희망은 나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그런데 2009년 신년 여론 조사에서 다들 희망은 자기자신이나 가족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나와 있다. 물론 정치에 관심 기울이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도 쌓이고 책 값도 좀 든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그 효율성이라는 것은 영화관에서 자세 뻗뻗이 세우고 영화보는 거랑 비슷하다. 그러면 당장 지금은 영화가 잘보이겠지만 모두들 그렇게 보면 영화도 앞사람 머리통에 가려서 안보이면서 다 같이 피곤하기만 하다. 이걸 수인의 딜레마라고 한다. 그 딜레마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수인의 딜레마에서 생각의 지평선이 갇혀 있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 양식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른다.

셋째로, 성인이 되고 나면 투표만 해서는 안된다. 투표만 하는 모델은 민주성이 부족하다. 투표해서 뽑아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려고 한다. 이번 기회에 말아쳐먹자고 난리 부른다. 스스로 심의된 의사를 표출하고, 의사를 결집하고, 제시하고, 정당활동 하고 이런 것이 모여져야 민주주의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 수 있다.

넷째로,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할까, 이런 걸 고민해야 한다. 경제성장이 최고라는 것은 대단히 안이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가문의 영광이 왔다고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안된다. 억울한 걸 파헤치는 목소리를 경제성장에 방해된다, 쓸데 없는 짓 한다, 외국자본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국민을 전부 돼지로 보는 거다. 우리는 돼지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은 진리와 정의를 고려한다. 민주주의의 실내용을 좋게 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실과 당위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다섯째로, 정당정치가 잘 되어야 한다는 식의 교과서적인 해설로는 지금 민주주의를 방어 하는데 그칠 뿐이다. 그리고 이 방어 싸움은 끝이 없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 여건에서 갑자기 정당정치가 잘 되기도 힘들다. 오히려 새로운 모델을 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열 받은 것을 제대로 풀어내야 한다. 열 받은 것을 쌓아두었다가 노무현이니 문국현이니 하는 사람들에게 훑어서 풀면 똑같은 일을 당한다. 우리는 지금 그나마 있는 민주주의의 기초와 여건마저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되,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민주주의 기준에 더 맞는 모델을 찾아내고, 그것을 도입하는 움직임을 펼칠 준비도 해야 한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다. 이야기 들어주어 감사하다.